

# I

## 2017년 젠더와 입법 포럼

발간사 03

### 2017년 젠더와 입법 포럼

2017년 젠더와 입법 포럼 06

### 국회 여성·가족 관련 개정안 동향

여성노동 및 일·가정 양립 14

여성(젠더)폭력 38

가족 및 돌봄 지원 61

성평등 및 성주류화 76

여성 건강 81

“젠더와 입법 포럼”은 매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입법과제를 공론화 하기 위해 개최되는 포럼이다.

2013년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국회와 입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학회, NGO 등과 함께하고 있다.

<b>제1차</b>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b>주제</b>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
	<b>일시</b> 2013년 3월 22일
	<b>주최</b>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b>제2차</b>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b>주제</b>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컨퍼런스
	<b>일시</b> 2013년 6월 4일
	<b>주최</b>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김춘진 국회의원, 민현주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b>제3차</b>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b>주제</b>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의 노동과 사회보장 - 법과 정책의 정비방향 한일국제컨퍼런스
	<b>일시</b> 2013년 9월 14일
	<b>주최</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b>제4차</b>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b>주제</b> 난민법 시행에 따른 난민여성과 아동의 인권보장 방안
	<b>일시</b> 2013년 11월 19일
	<b>주최</b> 이자스민 국회의원, 유엔난민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b>제5차</b>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b>주제</b>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노동문제와 입법·정책의 과제
	<b>일시</b> 2013년 12월 4일
	<b>주최</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b>제6차</b>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b>주제</b>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방안
	<b>일시</b> 2013년 12월 10일
	<b>주최</b> 김현숙 국회의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제7차</b>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b>주제</b> 젠더와 사회보험
	<b>일시</b> 2014년 4월 26일
	<b>주최</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b>제8차</b>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b>주제</b> 통일·사회통합과정에서의 젠더법 정책
	<b>일시</b> 2014년 6월 26일
	<b>주최</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b>제9차</b>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b>주제</b>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b>일시</b> 2014년 7월 5일
	<b>주최</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b>제10차</b>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b>주제</b>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기념 국제컨퍼런스
	<b>일시</b> 2014년 7월 10일
	<b>주최</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후원</b> 국회여성가족위원회
<b>제11차</b>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b>주제</b> 성희롱의 법적 규제와 예방체계
	<b>일시</b> 2014년 12월 20일
	<b>주최</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b>제12차</b> (2015년) 젠더와 입법 포럼	<b>주제</b>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
	<b>일시</b> 2015년 4월 29일
	<b>주최</b>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제13차  
(2015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
일시	2015년 7월 24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제14차  
(2015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사회보장과 젠더
일시	2015년 12월 18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제15차  
(2016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일시	2016년 7월 7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제16차  
(2016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한·독·일 고령사회 일·돌봄 양립실태 및 법과 제도 국제컨퍼런스
일시	2016년 9월 22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임이자·정춘숙·김삼화

제17차  
(2016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일시	2016년 12월 16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제18차  
(2017년)

젠더와 입법 포럼

주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 정부 여성·가족 입법과제
일시	2017년 6월 1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정춘숙·윤종필·신용현·박인숙,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2017년 6월 1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 정부 여성·가족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2017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이 개최되었다.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여성노동, 여성폭력, 가족, 성평등정책 등 영역별로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새 정부의 여성노동 및 성평등정책 강화 관련 입법과제”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 법의 제·개정을 통해 고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차별의 금지와 구제,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확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시행 등이 이루어졌으며, 일정 수준 선언적이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노동권 확보에 기여하였다. 특히 2007년 제8차 개정을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개정한 이후 남녀노동자 모두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고 보다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고용구조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들, 즉,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비정규직 여성비율, 관리직 여성비율, 성별 임금격차, 육아휴직 사용률, 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자 종사비율 등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여성노동 관련 대선공약으로 크게 성별임금격차 해소, 일·가족균형지원 강화,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과 새 정부의 대선공약을 참고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및 (가칭)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일·가족·돌봄 지원과 고용상의 성차별 정책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분리 입법 및 (가칭) ‘일·가족·돌봄 지원법’ 제정,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돌봄노동 일자리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가칭)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가칭) ‘성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윤덕경 연구위원과 황정임 선임연구위원의 “새 정부의 여성폭력 관련 입법과제”라는 발표가 있었다. 여성폭력 정책은 그동안 국민적 공분과 여성계의 노력으로 관련 법률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평등정책의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

매매를 중심으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특성화된 접근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었지만, 제도화 2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성 대상 폭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하며, 여성 대상 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또한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등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범죄피해가 출현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의 여성혐오 현상도 심각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그간의 여성폭력과 관련된 제도정책 발전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그동안 여성 대상 폭력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각각을 구분하여 예방-피해자보호-수사처벌의 프레임으로 구별해왔다면, 이제는 여성 대상 폭력들이 가해자 개인의 병리와 일탈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성별화된 범죄이고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권력구조에 기인한다는 근본적인 인식과 이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공고히 하며,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로 (가칭) ‘젠더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이원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세분화 및 형량 강화, 온라인성폭력 대응센터 건립, 스토킹 관련 법률 제정, 데이트 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으로의 목적 조향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 제도 도입, 성매매피해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성매매특별법」 개정, (가칭)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형법」상 여성혐오 관련 법적 기반 마련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송효진 연구위원과 김소영 연구위원의 “새 정부의 가족 관련 입법 과제”라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건강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국가의 명시적 가족정책이 시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2005년 가족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신설, 5년 단위 가족정책 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가족정책 전달체계(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 설치 등 현행 가족정책의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 이후 「한부모가족지원법」(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등 취약·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가족형태와 상황을 고려한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보육 등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개별 법·제도 마련과 정책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나,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유효한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과 정합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새 정부의 가족정책은 가족을 유형

별로 대상화 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로는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가족 개념의 재구성을 위한 「민법」의 가족 규정 개정, 다양한 가족 구성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등을 제안하였다.

토론으로는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가족정책연구원장,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옥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참석하였으며, 세 가지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과 보완점을 논하였다. 나아가 그 외 입법과제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성차별 금지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여성고용 확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젠더폭력 용어 도입, 형법상 낙태죄 폐지 또는 모자보건법상 낙태정당화사유 규정 개정, 여성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등도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새 정부에서는 여성의 삶을 반영한 과제들이 성평등 및 젠더주류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전면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